

# 文대통령 지지율 62%…6주째 하락

국방장관·기무사령관 진실공방에 靑악재

당대표 경선 민주당, 하락세 멈추고 '상승'

민생 불안과 최저임금 논란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국방부의 '기무사 문건 진실공방' 파문으로 더욱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64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주중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9%p 내린 62.0%로 나타났다. 6주째 하락세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오른 32.8%로 나타났다. '모름 및 무응답'은 0.5%p 감소한 5.2%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관련 '경제·민생 악화 불안감과 최저임금 논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문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간의 진실공방으로 비화하며 논란이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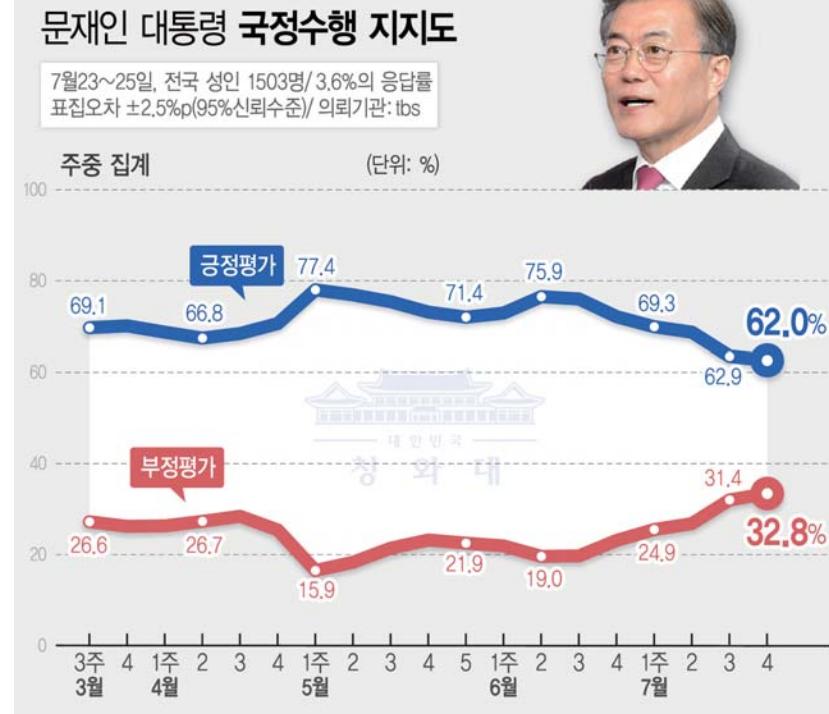
기무사 계엄령 문건 피문이 확산된 지난 20일 문 대통령 일간 지지율은 64.5%로 60%대 중반을 유지했

다. 그러던 중 지난 24일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문건 보고 방식을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3.5%로 하락했다. 송 장관과 이 시령관의 진실공방이 확대된 지난 25일에는 일간 지지율이 61.4%로 하락했다.

국방부가 거짓말과 하극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청와대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으로 심화된 민생 불안도 지지율을 장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당대표 경선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1.7%p 오른 45.1%를 기록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자유한국당은 0.4%p 상승한 18.7%로 2주째 원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으로 충격에 빠진 정의당은 0.1%p 오른 10.5%였다. 정의당은 노 의원 사망 당일인 지난 23일 일간집계에서 9.5%를 기록했다가 이튿날 10.2%, 지난 25일 11.0%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은 1.4%p 오른 7.7%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5%p 떨어진 2.7%였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23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194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3명이 응답을 완료 3.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자동응답·홈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포집률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지난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집권 2년차 민생 '빨간불'에 다급한 청와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으로 증폭된 민생 빨간불에 청와대가 다급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민생문제 해결 부족을 이유로 국정수행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다.

새 정부 출범 효과와 외교안보 이슈에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경제 현안이 집권 2년차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민생 수습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 전반적인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아대 청와대 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혈기 내각' 재안에 경제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하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일정으로 '민생'을 내세우며 경제 심판 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인선과 국회 인사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각종 국정과제의 국회 통과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경

제 정책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청와대가 경제 상황을 들판하기 위해 고심하는 부분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청와대 조직개편 첫 단추로 경제 수석과 일자리 수석을 교체하며 사실상 경제

비서관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임 비서관은 학자나 관료 출신이 아닌 현장 전문가로 내정한 상태다.

청와대는 다음달부터 업무추진비 결제 카드를 신용카드보다 수수료가 낮고, 결제대금 회수는 1~2일 빠른 직불카드로 바꾸기로 했다.

조직개편 1순위 경제분야…참모진 전격 교체·자영업 비서관실 신설

민생 해결 부족 평가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 장기화에 지지율도 흔들

靑 적극적 대응하는 모양새…현안 직접 설명과 대책 연쇄 발표 예고

라인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 문제를 전달하는 자영업 비서관실을 신설한다고 직접 밝혔다. 청와대 공식 발표 이전에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조직개편 일부 내용을 알리는 것은 아례적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금주 중 자영업

우리나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 바로미터'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이면서, 정부 구매카드 종류를 바꿀만큼 절박한 청와대 분위기가 드러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도 지난 2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중점 다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하반기 첫 순방지 인도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부회장을 현장에서 5분간 접견한 것은 청와대는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대통령 동선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지난 1일 새로 부임한 윤종원 경제수석이 언론 인터뷰 등 연이은 외부 활동으로 경제 정책을 홍보하는 점도 눈에 띈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정책 체감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윤 수석의 외부 활동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고민정 부대변인이 "우리나라 경제 정말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겠다고 묻자 "긍정적인 지표도 있고 일부 우려스러운 지표도 있다.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당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은 없다"면서도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원 "송영무 장관 중심 잘 잡아야"

"장관 훈들어 둘러난다면 국방개혁은 물건너 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 기무사령부 측 인사가 진실공방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장관은 그렇게 훈들어서 장관이 물려간다면 이 나라 국방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데 지휘 계통을 무시한 것이다. 기무사를 완전하게 개혁하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송영무 장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부가 국방부와 기무사를 삼대로 진행한 현안질의에서는 송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계엄문건 보고 당시 상황에 대해 엇갈린 답변을 내놓으며 진실공방이 불거진 바 있다.

박 의원은 2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무사의 문건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반란 음모"라며 "지금 기무사가 조직적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허물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유성엽 의원이 2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당 대표 출마의 변을 밝혔다.

## 유성엽 "흘러간 물이 다시 들어온다"

"유능한 새 간판 필요…'당명만 빼고 모든 것 바꿀 것"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유성엽 의원은 26일 "흘러간 물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을 거명했다.

그는 "평화당은 변화가 필요하다. 당명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한다"면서 "케케묵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당·경제정당·민생정당·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 전문가로서 평화당을 경제정당·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투명한 회계보고와 공정한 당내인사, 정기적 민생탐방·상황식 정책결정 등을 통해 당을 당원과 국민에게 둘러드ري겠다"고 약속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